KIEP 지역경제 포커스
REGIONAL ECONOMIC FOCUS
2013년 5월 13일 | Vol. 7 No. 30
ISSN 1976-0507

제13대 말레이시아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 전망

강대창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부연구위원 (dkang@kiep.go.kr, Tel: 3460-1014)
신민금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mgshin@kiep.go.kr, Tel: 3460-1169)
김유미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ymkim@kiep.go.kr, Tel: 3460-107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차 례

1. 총선 결과
2. 주요 쟁점
3. 정국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2013년 5월 5일에 실시한 제13대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이 승리함.

- 국민전선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역대 가장 저조한 지지세를 획득하여 진정한 승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의 주도권이 약화됨.

▶ 2008년 제12대 총선에서 야당이 말레이시아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의석수의 1/3 이상을 차지하여 말레이시아 정국 변화가 시작됨.

- 나집(Najib Razak) 정권 출범 시 부정부패 타파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각종 비리와 부패 스캔들이 나타남.
- 종족간 갈등과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둘러싼 소수종족의 불만이 고조되어 선거에서 국민전선의 지지세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 국민전선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야당연합인 국민연합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당분간 말레이시아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짐.

- 국민전선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일부 조정하면서 부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합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되나, 국민연합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선거불복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음.

▶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고소득 국가 진입을 위한 경제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여·야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철도·도로 등 대규모 교통기반시설 건설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고려하면, 향후 말레이시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에너지 상류 부문의 발전을 추진하는 여당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국기업은 말레이시아 에너지 상류 부문에서 투자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총선 결과

■ 2013년 5월 5일에 실시한 제13대 말레이시아 총선에서 여당연합인 국민전선[1]이 힘겹게 승리함.

- 국회의원 222명, 12개주 지방의회 의원 505명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는 1957년 독립 이후 줄곧 정권을 유지해 온 국민전선과 지난 총선 이후 급부상한 야당연합인 국민연합[2]의 유례없는 접전이 예상되어 일부에서는 최초의 정권교체를 전망하는 등 국내외 전망기관과 언론이 총선 결과를 주목해왔음.
-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국회의원 222석 중 국민전선이 133석, 국민연합이 89석을 차지함에 따라 국민전선이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2008년 총선에서 고전한 이후 목표로 한 의석의 2/3 이상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
  - o 국민전선은 고속경제성장 덕분에 독립 이후 모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으나 2008년 총선에서 최초로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여 당시 총리였던 압둘라 바다위가 사임함.
- 나집 라작(Najib Razak) 총리가 이끄는 국민전선은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사바주, 말레이반도 남단에 위치한 조호르주 등 농촌지역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 그러나 국민전선은 부정부패, 말레이계 우대정책(부미푸트라 정책)[3] 등으로 인해 중국계 및 도시 중산층의 지지를 잃어 셀랑고르주, 쿠알라룸푸르주 등 말레이반도 내 도시지역에서는 국민연합에 크게 뒤처짐.
  - o 부미푸트라 정책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계의 경제 장악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말레이계 우대정책으로, 이에 대해 비말레이계는 인종 역차별 정책으로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함.
  - o 국민전선 내 말레이시아화교연합회(MCA)는 이번 총선에서 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15석을 차지한 2008년 총선 때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4] 국민연합에서 중국계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행동당(DAP)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함.
-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국민전선이 12개주 중 켈란탄주, 풀라우피낭주, 셀랑고르주를 제외한 9개주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함.

---

1) 여당연합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은 통일말레이시아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말레이시아화교연합회(MCA: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 말레이시아인도인협의회(MIC: Malaysian Indian Congress)를 주축으로 하여 총 13개 정당으로 구성된 거대 연정임.

2) 야당연합인 국민연합(PR: Pakatan Rakyat)은 인민정의당(PKR: Parti Keadilan Rakyat),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Parti Islam Se-Malaysia),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의 3개 정당 연합으로, 2008년 총선 이후 구성됨.

3) 1969년 5월 13일에 종족간 소득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팽창하여 발발한 말레이계와 중국계와의 종족분쟁으로 약 2,000명이 사망하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통상적으로 부미푸트라 정책으로 불리는 말레이계 우대정책인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마련하고 안보법을 강화함. 신경제정책은 1976년부터 말레이계(부미푸트라)의 빈곤타파를 위한 한시적인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현재까지 말레이시아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음.

4) Oxford Analytica(2013. 5), “Malaysian BN wins election but faces new challenges.”

표 1. 2013년 5월 5일 말레이시아 총선 정당별 · 지역별 당선 개요

주(州)	국민전선	국민연합			총계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 (PAS)	인민정의당 (PKR)	민주행동당 (DAP)	
사라왁	25		1	5	31
조호르	21		1	4	26
사바	22		1	2	25
페라크	12	2	3	7	24
셀랑고르	5	4	9	4	22
케다	10	1	4		15
켈란탄	5	9			14
파항	10	1	2	1	14
풀라우피낭	3		3	7	13
쿠알라룸푸르	2		4	5	11
테렝가누	4	4			8
네게리셈빌란	5		1	2	8
멜라카	4		1	1	6
펄리스	3				3
푸트라자야	1				1
라부안	1				1
총계	133	21	30	38	222

주: 말레이시아 국회의원(하원)은 총 222석임.
자료: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http://www.spr.gov.my)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이번 총선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짧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촉박하게 치러졌으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와 야당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됨.

- 주요 총선 일정을 살펴보면, 4월 3일에 나집 총리가 의회 해산을 선언하고, 4월 10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일정을 발표함.
-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과 하원의원 입후보자 발표는 총선일의 약 보름 전인 4월 20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짐.
-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5일로, 말레이시아 총선 역사상 가장 길었으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단체'인 버르시(Bersih)의 요구사항인 21일에는 크게 못 미침.

■ 이번 총선에서 국민전선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역대 가장 저조한 지지세를 획득하여 국회 개헌 기준인 의석수의 2/3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도권이 약화됨.

- 국민전선이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133석은 당초 목표로 한 의석의 2/3(148석)에 크게 못 미침.
- 이번 총선에서 국민전선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최초로 절반에 못 미치는 48%의 득표율을 기록함.[5)]
- 이러한 총선 결과는 부정부패 확산, 부미푸트라 정책 지속,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전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

5) 말레이시아 선거구는 여당연합에 유리하게 획정되었다고 평가됨. 야당연합인 국민연합이 2008년 총선에서 49%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의석비율은 단지 38.3%였고, 이번 총선에서는 52%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나 의석비율은 40%에 불과함.

2. 주요 쟁점

가. 2008년 총선과 이후 쟁점

■ 2008년 제12대 총선에서 야당연합인 국민연합이 말레이시아 선거 역사상 최초로 전체 의석의 1/3 이상을 차지하여 정국 변화가 시작됨.

- 2008년 이전에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으나, 2008년에 실시한 총선에서 국민연합이 처음으로 의석의 36.5%(전체 223석 중 85석)를 차지하여 말레이시아 정치 구도에 변화를 가져옴.

표 2. 말레이시아의 역대 선거 결과(1974~2008년)

연도	국민전선		국민연합		전체 의석수
	의석수	의석비율(%)	의석수	의석비율(%)	
1974	135	87.66	19	12.34	154
1978	130	84.42	24	15.58	154
1982	132	85.71	22	14.29	154
1986	148	83.62	29	16.38	177
1990	127	70.55	53	29.45	180
1995	162	84.38	30	15.62	192
1999	148	76.68	45	23.32	193
2004	198	86.6	29	13.4	219
2008*	135	63.5	87	38.3	222

주: * 2008년 총선에서는 140석을 획득했던 국민전선이 2009, 2010년 보궐선거 시행 이후에 135석으로 감소함.
자료: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 2004년 총선에서는 여당연합 국민전선 내 말레이시아화교연합회(MCA)가 31석, 말레이시아인도인협의회(MIC)가 9석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총선에서는 MCA 15석, MIC 3석으로 의석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계와 인도계의 표심이 야당으로 돌아선 것에 기인함.

■ 국민연합과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의 불법선거 행위와 선거수단으로 악용된 국가안보법(Internal Security Acts)[6]에 대해 비판함.

- 2008년 선거 당시 여·야 간 치열한 접전이 있었던 셀랑고르주에서 여당연합 측의 유령투표자가 발견되어 국민연합과 그 지지자들이 거세게 항의함.[7]

6) 말레이시아 정부가 1960년에 테러와 쿠데타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국가안보법은 개인 및 단체가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다는 구실로 재판없이 구금이 가능하여 국제사회에서 반민주적인 제도로 비난받고 있음.
7) Oxford Analytica(2012. 10), "Malaysia's historic national polls portend instability."

- 2009년 5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2008년 선거 운동을 주도했던 반(反)여당 인도계 시민단체 Hindu Rights Action Force의 수장을 국가안보법 위반 명목으로 구금한 데 대해 같은 해 8월 약 2만 명의 시민이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가안보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음.

■ 2008년 총선 이후 시민단체 버르시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였고, 정부가 이 시위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저하됨.

- 2011년 6월에 '버르시 2.0'이라는 구호 아래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천여 명의 시민이 결집하여 정부의 불공정한 선거 체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함.
- 이들의 요구사항은 △ 선거인명부 개정 △ 우편 투표의 투명성 제고 △ 투표 시 지워지지 않는 잉크 사용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15일에서 21일로 연장 △ 모든 정당에 공정한 언론 접근 기회 부여 △ 선거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 선거 관련 비리 척결로 압축할 수 있음.
- 해당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시위를 무력 진압하여 여론을 더욱 악화시킴.

나. 2013년 총선의 주요 쟁점

■ 국민전선의 수장인 나집 총리는 취임 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13대 선거를 앞두고 각종 비리와 부패 스캔들이 대두되어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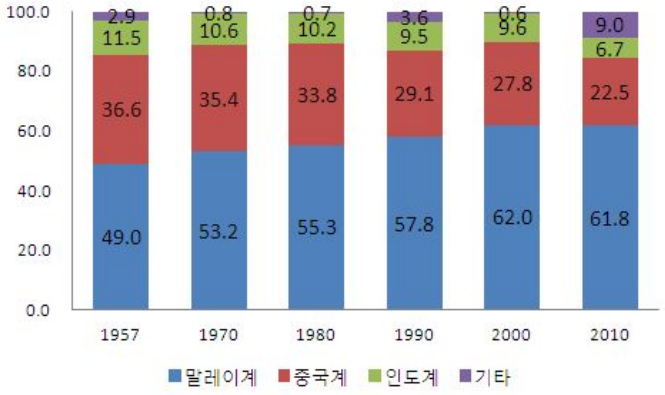
- 국민전선 내 말레이시아화교연합회와 말레이시아인도인협의회 의원들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중국계와 인도계 여당 지지자들이 야당으로 돌아섬.
- 현 정권은 야당을 지지하는 언론이나 인권단체에 대해 특정한 혐의 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킴.

■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둘러싸고 소수종족의 불만이 고조된 점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의 지지세를 약화시킨 주요 원인이 됨.

- 2010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말레이계가 약 6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계가 약 23%, 인도계가 약 7%를 차지함.
- 말레이계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소득 비중은 중국계보다 낮아(그림 2 참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수십 년 전부터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추진해옴.
- 말레이계 우대정책은 입학 정원 할당, 최소 지분율 규정, 채용 할당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말레이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중국계와 인도계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그림 1.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 추이(1957~201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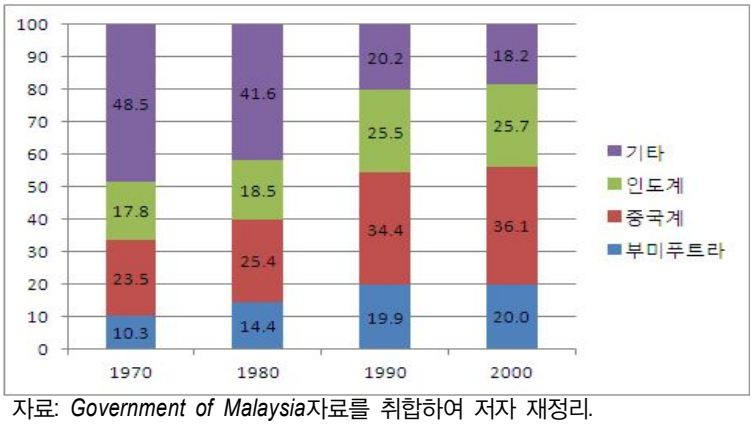


자료: Census Report of Malaysia.

- 말레이계 우대정책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자 나집 정부는 이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해당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나집 총리가 이끄는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세가 하락함.

그림 2. 말레이시아의 종족별 소득 비중 추이(1970~2000년)

(단위: %)



자료: *Government of Malaysia*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재정리.

■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전선의 승리를 위해 전통적인 지지기반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최저임금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 나집 정부는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소득 수준이 낮은 동말레이시아 사바주, 사라왁주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 1월에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는데, 이의 주된 목적은 총선에서 여당연합이 승리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8)]

8)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빈곤을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고자 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다는 정책적 명분을 제시함.

3. 정국 전망 및 시사점

가. 총선 이후 말레이시아 정국 전망

■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은 지도체제 개편을 단행하고, 야당연합인 국민연합은 결속력이 더욱 약화되어 향후 말레이시아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짐.

- 역대 가장 저조한 총선 결과로 인해 국민전선은 2008년 총선에서 2/3 의석 확보에 실패한 바다위 전 총리가 사임한 전례를 들어 2013년 말에 예정된 통일말레이시아국민조직(UMNO) 전당대회에서 나집 총리 교체 가능성을 제기함.
- 반면 국민전선 내에서 상대적으로 통일말레이시아국민조직의 영향력이 더 커졌는데, 나집 총리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그를 대체할 인물을 당분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나집 총리가 계속 집권할 가능성도 제기됨.
- 국민연합이 정권 교체에 실패하고 야당연합의 중심인 안와르의 인민정의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그 수장인 안와르의 영향력과 야당연합의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과 다민족의 권리 강화를 주요 강령으로 하는 민주행동당은 이슬람 정책을 두고 반목하였으나 안와르의 인민정의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단결해 왔음.
- 안와르의 영향력 약화로 기존에 반목하던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과 민주행동당의 불화가 표면화되어 국민연합의 결속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국민전선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일부 조정하면서 부분적인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전선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인 경제성장 촉진정책을 강화하여 지지세를 유지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전선의 전통적인 강세지역인 사라왁주, 사바주, 조호르주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민전선은 집권 기반인 말레이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지속할 것이나 중국계와 말레이계 중산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이를 보다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총선에서 중국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바, 국민전선은 중국계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국민전선이 우대정책의 대상을 중국계와 인도계를 포함한 전체 빈곤계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말레이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여 말레이계 우대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동시에 국민전선은 야당연합과 비판세력이 제기한 정치개혁 과제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됨.

■ 야당연합인 국민연합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여·야 간 갈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나 국민연합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선거불복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음.

- 이번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지워지지 않는 잉크가 도입되었으나, 야당연합인 국민연합은 투표 현장에서 지워지는 잉크가 발견된 점,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점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하지만 광범위한 부정선거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국민연합이 선거불복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 시사점

■ 말레이시아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말레이계 우대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과감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말레이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전문가들은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비효율을 야기한다고 주장함.
- 말레이계 우대정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내 두뇌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만 말레이시아가 중진국 함정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9)]
- 말레이계 우대정책, 빈약한 거버넌스, 능력주의 부재 등에 따른 불만으로 현재 중국계를 중심으로 약 백만 명에 이르는 말레이시아의 숙련인력이 고임금을 찾아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있음.
- 말레이계 우대정책이 말레이시아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비효율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과감하게 개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바, 말레이시아가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여·야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철도·도로 등 대규모 교통기반시설 건설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고려하면, 향후 말레이시아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국민전선과 국민연합 모두 일자리 창출, 저가주택 공급 확대, 철도·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건설, 부정부패 척결, 각종 세금의 단계적 인하,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함.
-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유사하여 국민연합보다 공약을 약 6주 정도 늦게 발표한 국민전선이 국민연합 측의 공약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음.[10)]

9) World Bank(2011), MALAYSIA ECONOMIC MONITOR Brain Drain, pp. 90-97.
10) PR(2013. 2), *Manifesto Rakyat: Pakatan, the People's Hope*, 국민연합은 보다 차별화된 공약으로 입법부 및 사법부 개혁, 말레이계 우대정책 철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실시, 언론의 자유 보장 등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보다 강력한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 향후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막대한 정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약 53%로,[11]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 국가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향후 총선 공약 이행 과정에서 더욱 상승할 우려가 있음.

표 3. 국민전선의 주요 공약 내용

분야	공약 내용
노동	불법외국인노동자 유입 규제, 330만 개 일자리 창출
의료	전국 주요 병원에 심장·암센터 건립
교육	특수학급 보유 학교에 연간 10만 링깃 지원
주택	공공·민간 저가주택 100만 채 건설 공공주택 개보수, 공공 임대주택 건설 40만 링깃 미만의 주택에 한해 생애 첫 구매 시 인지세(stamping fee) 면제
교통기반시설	전철 노선 연장, 고속버스 노선 확대, 고속철도·복합터미널 건설 남북고속도로(North-South Expressway) 확장 사바-사라왁 연결 고속도로(Pan Borneo Highway, 2,300km) 건설 쿠알라크라이-코타바루 및 감방-스가맛 연결 동해안고속도로 연장 반팅-타이핑 연결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포장도로 건설(말레이반도 내 6,300km, 사바주 내 2,500km, 사라왁주 내 2,800km)
자동차	차량 가격 단계적 인하, 국산차 경쟁력 제고
정치	부정부패 척결, 정부조달 관련 투명성 확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 내 투자기업에 대해 금전적 혜택 제공
대외협력	2015년까지 ASEAN공동체 실현 지지, 주요 교역대상국 및 신흥국과의 협력 강화
기타복지	시내 유료도로 통행료·소득세·법인세 단계적 인하 저소득층 대상 현금지원 규모 확대(1,200링깃/가구, 600링깃/1인 가구) 및 지원 연례화

자료: BN(2013), *A Promise of Hope*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 에너지 상류 부문의 발전을 추진하는 여당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국기업은 말레이시아 에너지 상류 부문에서 투자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를 석유 저장과 교역의 역내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정 서비스, 석유 저장, 석유 교역을 증진함으로써 석유·가스 상류 부문을 발전시킬 계획을 추진해왔고, 에너지 부문 발전계획은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음.
- 외국기업과 국내 민간기업의 에너지 상류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당연합은 총선 공약으로 정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10년 동안 100% 투자세액 공제 등 상당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함.
- 이를 고려하면 여당연합의 승리로 당분간 외국 에너지기업, 특히 정유회사는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상류 부문에서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국기업은 말레이시아 에너지 상류 부문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과 말레이시아 민간기업과 합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KIEP

11) EIU(2013. 2), "Country Report: Malaysia."

<부록 1> 말레이시아 정치 체계

- 국가명: 말레이시아 연방
- 정부형태: 선임제 입헌군주제
- 내각구성: 국왕이 총리 임명(관례적으로 다수당의 당 대표 임명), 총리의 조언에 따라 내각 구성
- 국가원수: 국왕(9개 주의 술탄(Sultan)이 교대로 5년 임기로 수행)
- 국회: 양원제; 상원 70명(26명 선거 통해 선출, 44명 국왕 임명) – 3년 임기, 중임 2회 허용

  하원 222명(총선으로 선출) – 5년 임기

  ㅇ 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국가 재정을 통제하며 국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상원은 하원이 발의한 법안을 동의하는 정도의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함.
- 행정구역: 주정부(9개 주(술탄이 통치)+4개 주(주지사))+3개 연방직할구

  ㅇ 각 주정부는 각각의 주의회, 주내각 등의 독립적인 행정 권한을 갖고 있음.